데스크시각

누구를 위한 '공개 소환' 폐지인가?

채 희 종
편집부국장·사회부장

20년 전인 1999년 7월 16일이었다. 사건기자였던 터라 점심 식사 후 출입처였던 광주 동부경찰서에 들렀다. 형사계를 한 바퀴 돌고 기자실에서 잠시 쉬다가, 전화 취재를 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된다. 오후 두세 시께로 기억하는데, 전남경찰청 한기민 폭력계장으로부터 '신창원이 잡혔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신창원이라는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것저것 물었지만 그는 '신창원이 순천경찰서로 오고 있어 출동해야 한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다. 두서없이 선배 기자에게 보고를 한 뒤, 사진기자와 함께 순천으로 출발했다. 전국의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사진기자와 사건기자들이 순천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취재진 앞에 섰던 신창원의 옷차림과 눈빛은 지금도 생생하다.

신창원은 1997년 1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 탈옥했다. 2년 반 만에 검거되기까지 연인원 97만 명의 경찰이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탈옥범을 놓친 경찰 60여 명이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신창원에게는 '희대의 탈옥수'라는 전무후무한 별명이 붙었다.

현장을 뛰던 기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자 최초로 경험한 포토라인 취재였다. 사건기자 시기를 벗어난 이후 공개 소환을 직접 취재할 일은 없었다. 이후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 포토라인이 그려지고 범법자가 공개 소환되는 사건도 불과 서너 건밖에 되지 않았다.

인권침해 주장도 있지만

2014년에는 검찰에 출두하던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공개 소환되는 과정에 포토라인에 섰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앞선 포토라인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개 소환이 있었는데, 두 건은 취재 대신 데스킹을 맡은 사회부장으로서 기사를 취급했다.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3월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 출두에 앞서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시장은 같은 해 12월10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광주지검에 공개 소환됐다.

공개 소환은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공인을 검찰에 소환할 경우 사전에 소환 일시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재벌이나 국민의 공분을 산 반인륜 범죄자 등도 대상이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25년간 유지된 관행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소환은 끊임없이 찬반 논란을 불렀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이다.

이제 공개 소환 대상을 살펴보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죽인 연쇄 살인마, 수백·수천억 원을 횡령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인, 국정을 농단한 관료, 부정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 이들은 지위나 재산만 놓고 보더라도 상위 1% 가운데에서도 1%, 요즘 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속할 것이다.

직장인이나 서민 등 일반 국민은 애초 공개 소환 대상에 끼지도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공개 소환 폐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없을 것이다. 대신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개 소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최고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 아닐까? 촛불 혁명 진행 당시 국정 농단 세력들이 하나하나 공개 소환되고 사법 처리됐을 때, 어느 누구도 공개 소환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 공개 소환으로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촉발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공개 소환은 국민이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인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최근 피의자 공개 소환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전국 검찰청은 사실상 공개 소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까지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 사건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 소환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오보를 낸 기자들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한술 더 떴다. 정부와 검찰의 발표라면 이젠 기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주는 대로 받아쓰는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 알 권리 우선해야

정부와 검찰은 공개 소환 폐지를 마치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검찰 개혁을 다짐하면서 굳이 공개 소환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비대한 수사권의 적절한 분산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알 권리'를 없앨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공개 소환 제도의 파트너는 언론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공개 소환 폐지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chae@kwangju.co.kr

은펜칼럼

진료실 폭력 그리고 진료 거부권

심 상 돈
동아병원 원장

이번에는 손가락이 잘려 나갔다. 심한 골절상의 환자는 수술과 재활의 치료 과정과 별개로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요구한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이 거부되자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진료실에서 신문지로 감싸 몰래 가지고 온 칼로 담당 의사에게 상해를 가했다. 엄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손의 다른 부위까지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그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특히 수부외과 전문 정형외과 의사에게 손이란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이다.

올해 초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본인이 진료를 계속해 왔던 환자의 칼에 사망한 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의사 약 90%가 '진료실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조사 자료가 있다.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 근무 형태와의 연관성은 없고 폭력에 대해 대부분은 '참거나 무시하거나 자리를 잠시 피한다'고 했다. 폭력을 경험한 70% 정도에서 스트레스, 두려움, 무기력, 분노 등 '심리적 불안정'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진료실 내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 그리고 진료실 밖에서 진료와 연관된 문제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의사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을 넘어서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단절로 환자의 행복과 건강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료실 폭력은 의사와 환자 개인 간의 이해 충돌 보다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만을 의사 개인에게 표출한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의사 단체에서 성명서와 함께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한꺼번에 들고 나와 성토를 한다.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올해 초 입법 발의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에 힘을 쓰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 15조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 예약된 진료 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 행위에 필요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투약, 시술, 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또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진료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정당한 사유'와 '진료 거부'의 현실적인 거리감과 감정적 괴리의 해결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폭력의 배후에는 조절되지 못한 분노가 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배후에는 실제보다 부풀려져 더 크게 느껴지는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분노 조절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2019년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전 장치는 법과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국가 밖의 힘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의 국가는 다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자국민의 보호만은 아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여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 의지로 선택한 직업에서의 안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진료실 폭력에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의사를 몰인정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의학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치료에 집중하고 환자와 소통하며 국민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책무이며,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 고

의사는 누구 편일까?

배 동 진
전남도 법무담당관

정부는 중증 환자나 움직이기 힘들어서 병·의원을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치료하는 '왕진 시범 사업'을 빠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인들과 서비스의 제공 및 절차, 법적 책임, 수가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으로 시범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늘날 한국의 의료 정책은 서구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으로 시작돼 1984년 알렌이 권세가 민영익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제중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조선을 침탈한 일제는 1914년 의사 면허 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내놓고 한국 의학을 탄압·멸시하였다. 미 군정 시기와 박정희 정부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한국의 전통 의료 정책을 말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이젠 서양 의술이 굳건하게 지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서구 의료 정책을 도입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전통 의술은 '환자 중심'의 '왕진 제도'로 의료인들이 환자를 찾아가 치료하였다. 한의원이 마을마다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픈 사람이 한의원까지 가서 치료받는 일은 힘든 일이므로 의료인이 환자를 방문, 치료하거나 처방전 또는 약을 지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했던 것이다.

오늘날 의료 체계는 아픈 사람이 병·의원을 찾아 가야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검사 기기와 치료 수단,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병·의원이기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것처럼 '중증 환자나 움직이기 힘들어서 병·의원을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치료하는 왕진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어쩐지 떼를 쓰는 것만 같다.

의사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 치료해 주는 일이 당연하건만 현재의 서구식 의료 체계에선 아픈 사람이 의료인이나 의료 시설을 찾아가 치료받는 형태로 바뀌었다. 어느 방법이 좋으냐는 건 환자 중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왕진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 되는 일이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부터 하면 도대체 의사·한의사들은 환자가 아니라 누구의 편이라는 말인가? 환자들을 불철주야 치료하는 의사·한의사들의 힘든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오죽했으면 의술을 배우는 예비 의사들이 힘든 외과 분야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한의사들의 환자를 낫게 해주려는 숭고한 마음과 인술은 고귀하기까지 하다. 이런 고귀한 희생 정신으로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되찾아주는 의료인들이야 말로 환자들에겐 생명의 은인이기에 한국사회에서 하이 클래스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의료인들이라면 부와 명예를 거머쥔 계층인데, 이처럼 귀한 대접을 받는 의료인들이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왕진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해서야 되겠는가? 환자 중심의 의료인이라면 앞장서서 나서야 할 일에 현실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중증 환자 등을 위한 시범 사업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를 의료인이 찾아가서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병·의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환자를 위해 정부와 의료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社 說

군 공항 이전 정부·지자체 합의기구 구성을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의 기구 구성이 절실하다.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광주시가 직접 나서고 있지만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군 공항 이전 업무 협의 등을 위해 무안을 비롯한 전남과 서울 등지를 86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전남 방문에서는 공무원과 이전 후보지 시민단체 및 주민협의체와 만나 지역민의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런 움직임은 되레 전남 도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의 공약 사업이자 국정 과제인 군 공항 이전에 국방부가 아닌 광주시가 직접 나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를 국가사업이 아닌 광주시의 현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거론되던 전남 지역 네 곳 가운데 무안과 해남이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들 시군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두 곳 모두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들은 논의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한편으로 광주시 면담 결과 반대 일변도로만 알려졌던 일부 지역 주민들 가운데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군 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가 주도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및 후보 지자체 등이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합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전 지역의 미래 청사진과 소음 대책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폐지 줍는 노인들 푼돈 몇천 원에 목숨 건다

길을 가다 유모차나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위태롭게 도로를 건너는 허리 구부정한 노인들을 마주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늘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무단횡단도 서슴지 않는다. 때문에 폐지 줍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제 새벽에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인근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70대 노인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노인의 손에는 폐지가 들려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인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는 2016년 283명, 2017년 273명, 2018년 206명 해마다 200명을 넘고 있다. 이 중 3년간 사망자 수는 66명에 달했다. 폐지 1kg당 가격은 40~70원으로 노인들이 하루 100kg을 줍는다고 해도 손에 돌아가는 돈은 겨우 5000원 남짓이다. 이 때문에 폐지를 줍기 위한 노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돈 몇 천 원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폐지 줍는 노인의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찾고 있는 서울·수원·청주 등 타 지역과는 극히 딴판이다. 광주시나 각 자치구 또한 지금이라도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복지 예산을 늘려 길거리로 나오는 노인을 줄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울릉도·독도 개척사에서 전라도 사람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조정은 왜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우게 하는 '쇄환정책'(刷還政策)을 추진했다. 섬 주민을 뭍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에 따라 울릉도도 조선 전기 이후 빈 섬이 됐다. 하지만 거문도·초도 등 여수와 고흥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뱃사람들은 해마다 춘삼월이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울릉도로 배를 띄웠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을 말려 가을철이면 울릉도 목재로 만든 배를 타고 돌아와 서해안 포구까지 올라가 팔곤 했다.

당시 일본 어부들도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면서 전복과 물개를 잡았는데 조선 어부들과 마찰을 빚었다. 조선 숙종 때 독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처음으로 분쟁이 일자 안용복은 두 차례(1693,1696년) 일본을 방문해 막부로부터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문서를 받아 냈는데 이때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전라도 사람들과 동행했다.

조선 말기에는 독도에 전라도 색채가 더 짙어졌다.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울릉도에 사는 주민 140명 중 82.1%인 115명이 거문도와 낙안 등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전라도 사람들이 주민의 대다수이다 보니 1890년에는 거문도 출신 오성일이 울릉도 도감(군수)에 임명됐다.

독도라는 이름도 전라도에서 유래됐다. 1900년 고종 황제는 칙령을 내려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울릉군의 부속 도서로 공식 고시했는데 석도는 전라도 사투리 독섬에서 비롯됐다. 1947년 울릉도·독도 조사대원으로 참가했던 방종현 서울대 교수는 돌이 많아 전라도 말로 독섬으로 불렸고 그 음을 따 독도(獨島)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약무호남 시무독도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에 독도라는 섬이 있다. 거금도 맞은편에 있는 돌섬인데 이곳에서 호남대생들이 독도 탐방단 발대식을 갖고 6일까지 4박5일 동안 구한말 전라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개척 코스를 답사한다. 이순신 장군은 일찍이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고 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의 가슴에는 아마 '약무호남 시무독도'가 새겨져 있지 않을까.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33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